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 2차/8월 임시회의 안건지

일시 17/8/17(목) 14:0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커뮤니티홀

작성 김기민(운영위원회 간사 겸 사무처장)

- 운영위원 명단 및 성원 확인

구성 / 총원 (10명)	출석	위임	불참
1. 김희자 (의장, 주민자치분과위원장)	○		
2. 류지숙 (교육분과위원장)	○		
3.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	○		
4. 배정학 (복지분과위원장)		○	
5. 이윤임 (추첨직 운영위원)	○		
6. 이종안 (부의장, 주민자치분과 추천)	○		
7. 전미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8. 전영지 (교육분과 추천)			○
9. 차정화 (건강분과 추천)			
10. 홍수만 (부의장, 복지분과 추천)	○		
합 계	7	1	1

※ 총원의 과반수(5인) 이상 출석시 성원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진행 현황 공유

- 7/28(금) 사업신청서 제출
- 7/31(월) 사업 보조자와 신청서 내용 숙지, 토의
- 8/1(화) 서울협치추진단으로부터 협의조정 및 심의 일정 통보, 1차 협의조정 장소 섭외 참석 대상자 일정 확인
- 8/7(월) 1차 협의조정 장소 섭외 및 협의회 측 참석자 통보

- 8/8(화) 1차 협의조정 회의 사전 준비, 사업 보조자 최나현 님 소개
- 8/11(금) 1차 협의조정 회의

구분	참석자
성북 (협치성북시민 협의회)	김희자 의장, 홍수만 부의장 겸 컨소시엄 대표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김철우 성북동천 대표(컨소시엄 참여단체1), 박학용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컨소시엄 참여단체2), 김기민 사업책임(예정)자, 최나현 사업보조(예정)자 등 6인 참석
협의조정위원	서진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최운정 외 서울협치추진단 협치지원관 1인, 이창환 사단법인 마을 이사, 위성남 마포구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책임자, 김창주(전 협치지원관), 서울협치추진단 혁신활동가 등 8인 참석

- 8/30(수) 2차 협의조정 회의
- 2차 협의조정회의 이후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2차 협의조정으로
완료될 경우 일정이며, 추가 협의조정 필요시 심사 일정은 9월로 변경

● 1차 협의조정회의 결과(요약) 공유

-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구조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컨소시엄 :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위상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산하 기구 1.2. 구성 : 성북마을살이연구회(대표단체), 성북동천(참여단체1),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참여단체2) 1.3. 실무 : 책임자 김기민 / 보조자 최나현 2. 협의회 회원 단체이기도 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컨소시엄 단체들이 협의회 산하 기구로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협의회 관계자가 사업 책임자 및 보조자가 상임활동가로 결합하는 형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협의회 사무처장이 사업책임자 겸직 2.2. 사업보조자가 협의회 사무처 운영팀장 겸직 예정
문제 인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협력플랫폼은 지역사회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성북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신청 전에 이미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으나,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외부에서 보기에 이미 조직이 완료된 것처럼 보여서 다른

	<p>주민조직 및 단체가 더이상의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다.</p> <p>1.2. 성북에서 협의회 존재가 네트워크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단일 조직으로 인식된다. 현재 회원제 조직인 협의회는 네트워크라기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 단체들과 다른 없는 하나의 신생단체가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p> <p>1.3. 사업 주관 기관 입장에서는 협의회보다 시민협력플랫폼이 더 드러나길 바란다. 현재 사업신청서와 사업 조직구조를 보면 ‘협의회’의, ‘협의회’에 의한, ‘협의회’를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 시민협력플랫폼은 특정 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협의회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고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p> <p>1.4. 성북구의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이 특정 몇몇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평가를 들은 바 있다. 협의회 부의장이 컨소시엄 대표단체의 대표이고 협의회 사무처장이 사업책임자인 현 상황은 시민협력플랫폼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특정 단체로 보이는 협의회가 주도하고 독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p> <p>1.5. 협의회가 포괄적 네트워크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아직 포괄적이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전면적인 참여로 폭넓게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자치구별로 한 곳만 선정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신청한 것이 대표성과 정당성 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p> <p>2.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구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p> <p>2.1. 현재 협의회 산하 기구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는, 추진단이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고 운영위원은 누구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적인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p> <p>2.2. 협의회 가입, 소속 또는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참여를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여야 한다. 협의회와 시민협력플랫폼을 동일시하면 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경우 플랫폼 참여에 있어 협의회 가입여부가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p> <p>2.3. 협의회 회원단체로만 구성된 현재의 컨소시엄 단체 구성은 제한적이다. 타 자치구의 경우 최대 7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컨소시엄 외 별도 협력기관까지 명시된 곳도 있다.</p>
<p>검토 의견</p>	<p>1. 협치성북시민협의회와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은 별개로 분리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p> <p>1.1. 협의회와 시민협력플랫폼을 일치시키는 것은 안 된다. 개방성의 문제도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해와</p>

	<p>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p> <p>1.2. 컨소시엄 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협의회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p> <p>1.3. 사업계획 상의 사업책임자와 컨소시엄 조직 구성을 볼 때 참여 주체가 동일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도 같다. 협의회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사업책임자를 겸직하는 구조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p> <p>2. 현재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 운영 주체가 일치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도 그것을 등치 시켜서는 안 되고, 포괄적 네트워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반드시 확장해야 한다.</p> <p>2.1. 컨소시엄이든 협의회든 사업 운영 주체가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구조를 조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괄적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을 더욱 부각시켜 보여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하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사업계획에 담아야 한다.</p> <p>2.2. 협의회가 초동주체로서 확장된 네트워크를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기구가 될 수 있다.</p> <p>3. 현재 협의회 회원단체 중심으로 조직된 컨소시엄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다</p>
<p>기타 의견</p>	<p>1. 성북이라는 지역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온 과정과 지역의 특성,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구조의 옳고 그름에 대해 가치 판단을 컨설팅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p> <p>2.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신청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사업 신청 전에 협치성북시민협의회와 같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 협의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2차 협의조정회의 전까지 협의조정위원들의 논의와 숙고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성북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p>

○ 사업계획(안)

	문제 인식	검토 의견
<p>1</p>	<p>시민협력플랫폼은 지역 시민사회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성북의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 강화보다는 협치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되물어보아야 한다. - 협치를 잘 하기 위한 또는 협치 사업을 위한 민간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이 사업을 통해

	<p>사업계획(안)에 제시된 주제가 너무 협치에 집중되어 있다.</p>	<p>시민사회가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협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거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업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사업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협치성북시민협의회의 틀을 넘어, 성북 지역의 시민사회가 풀지 못한 과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업에 담기면 좋겠다. - 기존 활동가의 활동력 증대, 신규 활동가의 역량 강화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지역의 시민사회가 강해져야 협치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치 역량 강화가 사업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 결과로서 협치역량도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같은 타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
2	<p>지역사회 현황, 문제 인식 부분에서는 시민사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세부사업계획에서는 협치 중심이 되어 있다. 실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사업 편성이 부족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의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의식과 시민협력플랫폼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문서에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의 목적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협의회 조직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제도나 사업, 행정의 관점에서 사업계획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의 기존 시민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거기에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시민그룹들을 등장시키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3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이 갖고 있는 기본 인식과 동일해보인다. 의제발굴, 공론장 등 타 사업/활동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과 중복되는 영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 무엇을 위한 의제발굴이고 공론장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무엇'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 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론장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해야 한다.
4	지역사회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사업 추진주체의 인식에 기초하여 세부사업 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인식과 사업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문제인식은 일반적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해법으로 제시된 사업들이 세부적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안)을 읽을 때는 수긍이 되지만,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왜 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있어 성복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 재정취약, 협력기반 부재 등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 기존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네트워크 조직,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지원, 시민활동가 성장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5	협치성복시민협의회가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지만 현재 지역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현실에서, 협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신규 참여자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있는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조직 비전과 향후 구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6	대표성을 가져야 시민협력플랫폼이 원만하게 기능하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이 협치기반 조성이고, 주 사업대상이 기 지역단체보다는 신규 조직이나 주민들이다. 기존 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금의 사업계획(안)에 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폭넓은 합의가

		<p>전제되어 있는가. 같은 지역주민을 놓고 비슷한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p>
7	<p>3년 뒤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연차별 성장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업 취지를 전제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 (가령 현재 지역단체, 중간지원조직들이 겪고 있는 업무 과부하 문제를 현재 시점보다 어느 정도 미만으로 감소시키겠다 등) - 1, 2, 3년차별로 명확한 목표를 정해 적시해야 한다. - 2~3년차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령 1년차 새로운 시민 그룹 발굴, 2년차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 - 협의조정회의에 참석한 분들끼리 합의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가 전반과 합의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이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8	<p>기존 마을사업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이미 확인된 문제의식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 - 마을사업의 문제점을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플랫폼 사업이 다뤄야 할 과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p>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을 구축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너무 많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사업보다는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계에 방점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 - 사업계획상 공론장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존 마을센터에서 1년간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업이다. 신생 컨소시엄에서 책임자와 보조자 2명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다. -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	사업계획(안)에 대한 토론에서 나온 문제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들을 가운데 사업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 토론 과정에서 구두로 표현되었지만 사업계획(안)에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의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 1차 협의조정회의 참석자 의견 공유

- 김희자 의장
- 홍수만 부의장 겸 컨소시엄 대표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 김기민 사무처장 겸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책임(예정)자

- 안건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주체로서 협치성북시민협의회의 적절성 여부
 - 협치성북시민협의회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것에 대한 협의조정위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협의회 운영위원 및 회원들의 의견 확인
 - 2차 협의조정회의 대응 방향 논의
- 사업계획(안) 수정 방향 검토